

# 신사참배[神社參拜]

## 한국인들의 정신을 통제하라!



### 1 개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신도, 신사는 타민족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동화(同化)시키는 수단임과 동시에,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단결하게 하는 방안이었다. 일제는 한국 침략과 동시에 신사를 건설했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신사를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는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강화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를 중심으로 애국반(愛國班)을 편성했으며, 신사참배, 궁성요배(宮城遙拜), 황국 신민 서사(皇國臣民誓詞) 제창 등을 강요하고 감시했다. 신사참배에 강요에 대해서 학교, 종교, 개인 차원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탄압과 억압으로 제압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던 신사를 파괴했다. 신사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억압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다.

### 2 일제의 침략과 조선총독부의 신사·신도 정책

신사는 신도(神道)의 사원이다. 신도는 일본 고유의 민간종교를 의미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각지에 신사를 건립했다. 신도를 통해 '천황제' 국가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천황의 선조를 신사에 두어 천황의 가문을 신격화하고, 동시에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식민지를 동화시키고 군국주의 침략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로도 사용했다. 신도, 신사는 타민족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동화시키는 수단임과 동시에,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단결하게 하는 방안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침략하면서 신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국병합' 이전에는 일본 거류민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신사의 건립과 유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관·공립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내무국 지방과를 중심으로 관립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립신사를 설립하는 장소는 남산 중턱이었으며, 총 20만 평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일본 내각의 결의를 거쳐, 1919년 7월 18일 조선 신사를 건립한다는 내각 고시로 발표되었다. 1920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1925년 완공되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은 신사 건립은 한국인들을 일본에 충성하도록 하고,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관립,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선 신사 건립을 추구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신사사원규칙(1915년 8월 16일)' [관련자료](#), '신사에 관한 건(1917년 3월 22일)' [관련자료](#) 등을 발표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통치 정책에 변화를 꾀했다.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분열시키는 이른바 '문화 통치' 정책을 추진했다. 종교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 실행되었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을 교수하고 종교행사를 할 수 없었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조선 총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불교와 유교에는 친일 세력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종교를 통제하였다. 반면 신도와 신사의 보급은 더욱 장려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1924년 총독부 학무국장은 통첩을 내려 신사참배를 권장하였으며, 1925년 조선신궁의 진좌제(鎮座祭)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 3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정책 강화, 강요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는 1925년 이후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일본 및 식민지 전역에 종교 통제가 강화되고, 신사참배가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도 이에 편승했다. 1931년 6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내선 융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1932년부터 '사회교화사업(社會敎化事業)'을 추진했다.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는 1936년 6월,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936년 8월 1일, 조선총독부는 천황이 발한 '칙령(勅令)'으로 조선 신사제도를 개정하는 법률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신사가 격에 따라 도, 부, 읍, 면으로부터 신찬페백료공진(神饗幣帛料供進)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면 1신사(一面一神社)'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에 신사를 건립하도록 했다. 일제 말기에는 전국의 신사는 1,00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전시 체제에 들어간 일본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여,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신사참배 강요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를 중심으로 애국반을 조직하고, 신사참배, 궁성요배, 국기계양, 황국 신민서사 제창, 근로봉사 등을 강요하였다.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하게 하였다. 가미다나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일종의 소형 신사였다. 조선총독부는 경찰 안에 감시대를 조직하고 한국인들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실행하는지 감시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던 신사를 파괴하는 행동에 나섰다. 해방 후 8일 사이에 신사가 파괴·방화되는 일이 136건 일어났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신사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억압의 상징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신사참배 거부 운동

신사참배 강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학교였다. 1932년 9월, 평양 서기산에서 '만주사변'에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위령제가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이 참가할 것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기독교계 학교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국민의례로써 신사참배를 엄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1932년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총독부와 교섭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총독에게 2차례에 걸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총독부 관계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저지되었다.

1935년, 평안남도 지사는 도내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평양 신사참배를 지시하였다. 이에 기독교 사립학교장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평안남도 지사는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조선총독부의 태도도 강경했다. 오노(大野謙一)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은 "국가 의식에 참배는 당연하며, (참배를 거부한다면) 폐교도 불가하다"라고 언급했다. [관련자료](#)

이후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에 대한 공식적인 토의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개인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평안남도 박관준(朴寬俊) 장로는 총독에게 청원서와 경고문을 보내,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관찰되지 않자 일본 정계 요인들을 만나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목사였던 김선두(金善斗)는 일본 정계 요인들을 포섭하여 조선총독부가 결정한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를 막으려고 했다.

1938년 이후 한국 교회는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대하여 신사참배 정책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검속하고 탄압했다. 1940년 6월부터 9월에는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때 많은 인사들이 투옥되어 옥

고를 치렀다. 이와 함께 개인이 진행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도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해방 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